

우리 건축계의 몇 가지 현안

Questions of The Day

안영배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Ahn Young-Bae

최근 우리나라 건축계는 제법 활기를 띠고 있다. 수만 평이나 되는 대형 건축 프로젝트들이 수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의 작은 도시를 이를 만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여러 곳에 지어지고 있다. 대학마다 건축과 입학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취직률도 다른 분야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같이 활기있고 화려해 보이는 건축계 이면에는 심히 우려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건축계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이 많다. 그 중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몇가지 현안에 대하여 단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건축교육제도

우리나라 건축 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이에대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한지는 벌써 오래된 일이다. 대한건축학회는 물론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이에대한 세미나가 수없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개선 안이 제기되었지만 이것이 실행단계에서는 별로 큰 실효를 못보 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교육의 근본목표인 창의성 개발과 자율화를 강조하면서 전환적인 교육개혁의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좋은 시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점은 바로 설계교육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건축설계와 기술 공학을 모두 고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물론 기술공학분야의 교육도 모두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건축교육제도를 보면 설계교육에 치중하면서도 5년제가 많으 며 학부 4년제인 경우 대학원 레벨에서 3년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 비 하여 훨씬 두뇌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하에서는 장차 WTO제도하의 국제적 경쟁력에서 우리나라의 건축사가 결코 뒤 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선진 국가에서의 건축 교육의 목표는 창의력을 중요시하면서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 는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넓게 교육시키기

에는 대학 4년 기간이 너무 짧으며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교육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야의 학문을 깊이 있게 학부과정에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변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4학년 학부과정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더 폭넓게 교육시키고 대학원 과정에서 좀 더 설계에 치중되는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가 아니면 학부 과정에서부터 건축설계, 구조공학, 생산기술 등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있게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 학부를 마련하는 양자택일 방식의 다양한 교육제도가 강구되어져야 한다.

건축사 전형 제도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학졸업 후 5년의 경력이 인정되면 건축사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대학졸업 후 5~6년 정도되면 건축설계사무소는 물론 건축계열의 모든 회사에서 가장 능률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견 사원에 해당된다. 이를 중 상당수가 해마다 건축사 전형 준비로 인해 직장을 쉬거나 직무가 극히 태만해 진다고 한다. 응시자가 일년에 6, 7천명이나 되고보니 중견 사원의 부족현상이 일어나며 이로인한 설계사무소의 손실이 대단히 크다. 그뿐아니라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설계사무소의 보조원들이 잡념 없이 설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미의 여러나라에서는 건축교육이 설계중심으로 되어있고 교육년한이 5~7년정도로, 졸업 후 바로 건축사 면허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2년정도의 경력만 있으면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들은 우리보다 많은 연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입사하면서 우리보다 능력이 높은 것이 자명한 일이며 입사 후에는 설계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년한이 4년으로 짧은 편이며 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학 졸업 후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함으로 외국에 비해 장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대학졸업 후 설계사무소에서의 능률도 외

국에 비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5년이 지나면 자격시험 응시준비로 인해 사무소에서의 업무능률이 또한 저하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앞으로 WTO제도에 대처해 나갈 때 우리 건축사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전형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도 대학의 건축교육이 설계위주로 되는 건축대학이 설립되지 않는 한 건축사 전형제도는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건축사제도가 개선되어 1차시험은 졸업 후 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2차전형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필자는 실기시험의 전형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해 보고, 실기전형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크게 절감했다. 단시간에 이루어진 도면만으로 설계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실기시험을 위해서는 넓은 장소가 필요한 관계로 해마다 넓은 전형장소를 구하기 힘든 것도 문제이며 많은 감시인원이 필요한 것도 문제이다. 모든 도면을 CAD로 작성하는 최근의 추세에 역행하여 연필로 작도하는 것도 문제이며 설계자의 능력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출제문제 선정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현행의 전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설계경력을 중요시하는 제도가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즉, 예를 들어 7년에서 10년가량의 일정한 설계경력만 확실히 인정되면 실기전형은 면제하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전형제도의 병행이다. 경력중시의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건축사 보들은 건축사보 전형 신드롬에 해매지 않고 설계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축사제도가 60년대 중반에 맨처음 실시될 시 10년 이상인 경력자는 간단한 면접전형만으로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했었다. 반면에 10년 이하의 경력자는 모두 정규적인 방법으로 전형을 받아야 했다. 이 당시 많은 젊은 건축인들이 이 조치의 불평등을 내세워 응시거부 시

위를 벌였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 지금에 와서 회고해 보면 10년 이상인 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일시에 그치지 않고 계속 존치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법적조치는 가능한 한 모든 삶들에 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초고밀화 방지

선진국가에서는 공동주택 설계가 건축가의 가장 좋은 설계과제로 되고 있다. 미국 지역에서는 찰스무어, 리처드 마이어, 마이클 그레이브스, 로버트 스�顿 그리고 구라파 지역에서는 리카르도 보필, 양리 시리아니,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등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들 건축가들은 모두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그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건축가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축설계가 너무나 획일적이어서 유능한 건축사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다만 배치계획만이 건축사들의 주된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어진 대지조건에 어떻게 하면 좋은 주거 환경을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느냐가 더 큰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공동주택 단지의 초고밀화 현상이다. 주택부족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바로 초고밀주택의 실현이다.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되었다가 다시 400%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주거단지에서는 제대로 된 개방 공간도 마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조, 조망 그리고 주차장 등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조건마저 해결하기가 힘들다. 몇 일 전 안암동의 모 주택단지에서의 화재발생 시 진입로에 많은 차가 들어서 있어 소방차 출동이 30분이나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한 사실이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건축심의를 실지로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초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설계심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

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도시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주택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크게 완화시킨 점도 또한 큰 문제이다. 다세대주택에서 나타난 주거환경의 악화가 주상복합빌딩으로 인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때 심각한 주택지 부족으로 인해 고밀화를 허용했던 외국에서도 용적률 250%가 넘는 주거단지는 주거환경이 너무나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건물의 철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0년도 안되어 고층고밀의 공동주택 철거가 크게 예상되는데 외국에서 이미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또다시 답습해야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건축사들이 후일 후배들의 지탄을 크게 받지 않으려면 우리 건축계가 합심하여 공동주택의 초고밀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설계경기운영제도의 개선

건축계의 3단체가 운영하는 설계경기운영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제정된 경기설계 기준이 모체가 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작년 초에 공고하였다. 이것은 우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대단히 반가운 일이었으며 건축사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최근 정부의 주요기관은 물론 공공단체들이 이것에 의거하여 경기설계가 진행되는 실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립박물관과 고속철도역의 경기설계가 이것에 의거하여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시행되는 경기설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응모안 중 2개 안을 가작으로 선정하여 약간의 실비만을 지불하고 당선 안에 대해서는 아무 상금없이 설계권만 부여하는 일이 상례화되고 있다. 경기설계지침에는 상금은 설계비의 20%이상이어야 하며 이 금액은 예산상의 이유로 설계비에서 감할 수 없게 되어있다. 많은 상금을 내세워야 유능한 건축사들이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

구하고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무소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 결정을 주최자가 임의로 바꾸어 실행한다 해도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할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기설계기준은 어디까지나 갑(주최자)과 을(응모자)사이에 불이익이 안되도록 하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훌륭한 지침서이다. 상금이 많아야 우수한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이 미리 공고되어야 심사위원의 구성 여하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면서 안심하고 응모할 수도 있다.

경기설계가 많이 개최되는 선진각국에서는 경기설계지침서 이외에 좋은 성과를 얻기위한 자세한 설명서와 함께 좋은 선례들을 예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주최자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타 안을 선정할 시에는 최우수작 설계자에게 응분의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타 안을 선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주최자가 심사에 참여할 때에는 무조건 최우수작에게 본 설계를 위촉하여야 하며 주최자가 심사에 참여치 않는 경우 최우수작 두 개를 선정하여 주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융통성있게 자세한 경기설계기준을 작성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설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진외국에서의 규정들을 연구·검토하면서 현행의 경기설계기준을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연구비 마련을 위한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3단체회원 중 경기설계에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큰 곳은 어디까지나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인 만큼 건축사협회에서는 타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3단체가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경기설계기준을 좀더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적 뒷받침이 없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건축사들이라고 한다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경기설계기준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연구비의 뒷받침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의 운영비용 분담도 타 단체보다 훨씬 증액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설계를 실시해야만 할 정도로 기념적이고 중요한 건축물이거나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경우는 경기설계를 자체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지도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구조안전신드롬과 건축 문화

성수 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연쇄적 대규모 참사로 인해 우리건축계는 사회에서 큰 지탄을 받고 있으며 많은 건축인들이 구조안전 신드롬에 빠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감리제도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으며 구조 안전에 있어서 건축사들의 책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단순한 기술분야로만 격하시키려는 사회풍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문화와 건축구조기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사는 문화적 측면과 구조안전분야의 책임까지도 동시에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건축사전형제도에서 구조학과 구조공학의 비중이 큰데서 비롯되었다.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구조물설계의 구조안전은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전담케 함으로써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책임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사의 전형과 목에서 구조역학분야의 과목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역할분담이 확실히 구분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구조안전의 지나친 중시경향이 건축의 예술 문화적 측면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축설계에 있어서는 구조안전분야 이외에 사용상의 기능과 조형성 그리고 도시환경적 측면, 인간행태와 사회적 측면 등 배려할 점이 너무나 많다. 중요 구조물의 구조안전분야는 구조기술사에게 전담하게 해야만 건축사는 건축의 예술 문화적 측면에 좀 더 주력할 수 있는 것이다.